

# 평화를 위한 인권 기반 다지기

인권을 중심에 둔  
포용력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평화 프로세스

토론서(Discussion paper), 2020년 9월



UNITED NATIONS  
**HUMAN RIGHTS**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 유엔, 2020년 9월

표지: 함경북도 출신 작가 안충국

## ● 목차

- I. 개요 | 5
- II. 서문 | 7
- III. 방법론 | 8
- IV. 배경 | 9
- V. 평화, 비핵화, 통일, 정의 실현 및  
책임 규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 | 11
- VI. 평화를 위한 인권 기반 다지기 | 17
- VII. 결론 | 32
- VIII. 권고 | 33
- IX. 별첨: 인권 기준 | 35

## I. 개요

본 토론회(discussion paper)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한 이들(이하 “이탈자”)<sup>1</sup> 일부의 시각을 담아내고자 작성됐다. 이탈자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면담에서 한반도 내 평화 프로세스<sup>2</sup> 및 관련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본 토론회는 이탈자의 관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인권과 법치주의 관련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살폈다. 본 토론회는 현재 한반도 내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려는 노력에 기여하고자 작성됐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의 경험, 의견, 필요(needs)를 고려하여 더 많은 이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이탈자가 인지 및 이해하고 기대하는 바를 기술한다. 아울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침해를 다루는 수단으로써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을 바라보는 시각을 포함한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탈자 대다수가 평화 프로세스를 인지하고는 있으나 협상 세부 내용 또는 결과를 잘 알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탈자 대부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비핵화와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남북 간 정치 및 경제적 차이가 상당하기에 통일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 이탈자 일부,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에게 평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협상 시 인권이 논의되지 않은 점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이탈자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거주하던 당시 일상에 영향을 줬던 주요 인권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또한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는지를 기술한다.

관련하여 이탈자는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권 문제로 다음을 꼽았다. 성분, 사회·경제적 지위 및 젠더에 따른 차별, 취업 및 경제적 기회, 법치주의 및 기본적인 자유의 부재, 부정부패 및 권력 남용, 교도소와 구금 시설 내 고문, 학대, 성폭력 관행 및 비인도적 환경, 정치범 수용소, 가족 이산 및 국제 납치 문제, 과거 자행됐고 현재도 자행되는 인권 침해를 다룰 정의 실현 및 책임 규명 등이다.

<sup>1</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여성 61명과 남성 2명을 포함한 이탈자 63명과 면담을 진행했다. 세차례 표적집단토론회에는 남성 10명과 여성 2명을 포함하여 총 12명의 이탈자가 참석했다.

<sup>2</sup> 본 토론회에서 “평화 프로세스”라는 용어는 남북 관계, 안보, 비핵화, 경제 및 인도적 지원 관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 및 협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됐다.

본 토론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미국 및 국제공동체로 하여금 평화 협상 시 인권을 고려하도록 권고한다. 별첨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인권을 근간으로 한 개혁 절차를 개시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만한 권고 목록을 제공한다.

## II. 서문

본 토론서는 현재 진행 중인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한 이탈자 일부의 시각을 조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됐다. 현 평화 대화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따라서 본 토론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평화 프로세스에 유의미하게 참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권과 관련하여 필요한 변화를 제시하고 이 때 국제공동체 역할을 강조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은 정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며<sup>3</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해당 국제 규약 당사국이다.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적 포용, 젠더 평등, 경제 발전을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정부 당국이 의사 결정의 의무는 지니지만, 사회 여러 부문이 참여한다면 더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고, 결과적으로 국가가 취하는 조치의 합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개발권<sup>4</sup>과 인권 전반의 완전한 실현에 있어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유의미한 대중 참여가<sup>5</sup>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모든 단계에 있어 포용력 있고 참여를 독려하며 대의에 따르고 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한다.<sup>6</sup> 여성, 평화 및 안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는 평화 협상과 분쟁 후 평화 구축 및 거버넌스에 있어 여성의 참여와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확인했다.<sup>7</sup> 포용력 있는 의사 결정과 유의미한 참여는 평화 프로세스를 포함하여 지속가능한 평화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sup>8</sup>

<sup>3</sup>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 2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당사국으로 참여한 기타 국제 인권 조약, 가령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아동권리협약, 장애인권리협약 등도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포함한다.

<sup>4</sup>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은 1986년 12월 4일 유엔 총회 결의안 41/128호로 채택됐다. 발전에 있어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sup>5</sup> 참여는 평등과 비차별, 의견과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에 대한 권리, 발전에 대한 권리 등과 같은 기타 권리 향유를 증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sup>6</sup> 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sustainabledevelopment.un.org/>. 지속가능개발목표 이행과 모니터링을 위해서 차별을 당하거나 뒤처질 위험이 가장 높은 이들을 포함하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유의미한 참여가 필요하다.

<sup>7</sup>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 노력에 있어 젠더 관점을 고려하고 젠더를 동등하게 대변하도록 결의안 1325호를 2000년 10월 채택했다. [https://undocs.org/en/S/RES/1325\(2000\)](https://undocs.org/en/S/RES/1325(2000))

<sup>8</sup> 유엔과 세계은행 공저(2018). “평화로의 길: 분쟁 예방을 위한 포용적 접근.”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28337/2111620v.pdf?sequence=6&isAllowed=y>

### III. 방법론

본 토론회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 이탈자<sup>9</sup>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63건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대부분 북중 간 육상 국경을 통해 2018년이나 2019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했다. 면담 대상자로 [북에서] 장사를 했던 이들, 주부, 교사, 간호사, 농부, 학생 등이 있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또한 2018년 이전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탈자로 인권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들과 표적집단토론을 세 차례 진행했다.

개별 면담과 표적집단토론은 모두 대한민국에서 이뤄졌으며, 이탈자가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평화 프로세스,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한 인권 문제, 지속가능한 평화 달성 방안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내놓을 수 있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정성적으로 정보를 분석하여 개별 면담과 표적 집단토론에서 드러난 주된 양식과 주제를 파악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면담 대상자에게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충분히 설명한 후에 정보 사용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했다. 면담 대상자의 신분이나 기타 세부 사항은 안전을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 접근이 여전히 불가능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과 면담을 진행하지 못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탈자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반 대중 사이 여러 견해 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며, 본 토론회가 모두의 경험과 견해를 아울러 대변한다고 보지 않는다. 다만 토론회를 통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일부 이탈자 견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지금까지 평화 프로세스에서 배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를 강조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출신 국외 거주자를 포함하여 해당국 국민과 협의하고 이들 견해를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면 현재의 평화 외교에 유의미하게 한 차원을 더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sup>9</sup> 대한민국에 도착한 이탈자 대다수는 여성이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도착한 남성 이탈자와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제한적이다.

## IV. 배경

한반도 내 상황이 2018년 초 변화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은 관계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세 차례 정상회담을 열었다. 양측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판문점 선언)에 2018년 4월 27일 서명했고, 평양공동선언에 2018년 9월 19일 서명했다.

판문점선언은 한국전쟁(1950-1953)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군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하며,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협력을 활성화하며 가족 이산 피해자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sup>10</sup> 평양공동선언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한다면 영변 핵 시설도 폐기할 의지가 있다고 약속했다. 남북 양측은 또한 군사적 적대 행위 종식을 확대하고 남북 간 문화, 사회, 경제 협력을 개시하며, 가족 이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관광, 철도 및 도로 협력 사업을 개시하도록 합의했다.<sup>11</sup>

사상 첫 북미 간 정상회담이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고하고 흔들림 없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양측 정상은 한반도 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 구축 노력을 지속하도록 추후 협상을 이어갈 것에 합의했다.<sup>12</sup>

미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제 2차 정상회담을 열었지만 합의 없이 종료됐다. 이후 협상은 중단됐다.

한반도 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심각한 인권 상황은 실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 협상 최전선에 비핵화가 자리하고, 평화 프로세스 상 인권 문제는 다루이지 않고 있으며, 여성을 포함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목소리는 부재하다. 대한민국 내 시

<sup>10</sup>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https://www.mofa.go.kr/eng/brd/m\\_5478/view.do?seq=31913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https://www.mofa.go.kr/eng/brd/m_5478/view.do?seq=319130&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titleNm=)

<sup>11</sup>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www.mofa.go.kr/eng/brd/m\\_5476/view.do?seq=3196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http://www.mofa.go.kr/eng/brd/m_5476/view.do?seq=31960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

<sup>12</sup>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joint-statement-president-donald-j-trump-united-states-america-chairman-kim-jong-un-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singapore-summit/>



민사회단체는 평화 협상 시 인권 문제를 포함하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인권을 평화 프로세스의 중심에 두고 분쟁 방지와 평화 구축의 방편으로 인권을 활용하도록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sup>13</sup> 유엔 사무총장도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협상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안녕과 천부의 존엄성을 중심에 두도록 강조했다.<sup>14</sup>

---

<sup>13</sup> 유엔 인권 전문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에서 성과를 내는 데 인권이 주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22988&LangID=E>

<sup>14</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유엔 사무총장 2018년 8월 보고서.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8/251/74/PDF/N1825174.pdf?OpenElement>

## V. 평화, 비핵화, 통일, 정의 실현 및 책임 규명에 대한 인식과 이해

본 장은 비핵화 및 통일과 관련된 인권 문제를 이탈자가 얼마나 알고 이해하는지, 또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평화 프로세스에 유의미하게 참여하고 의견을 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지 살펴본다. 아울러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에 대한 인식과 견해를 살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과거에 자행됐거나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인권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메커니즘이 무엇일지에 대한 이들의 인식과 견해를 조명한다.

### a) 평화와 비핵화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과 중국에 방문했다고 들었다. 텔레비전 방송에서 회담이 잘 끝났고 [지도자들] 모두 안전하게 돌아왔다고 했다.”<sup>15</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탈자 대다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미국 간 회담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sup>16</sup> 통일, 비핵화, 경제 개발, 제재 조치 해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고 이해하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의 경우 도시 거주자는 국영 방송을 시청하거나 청취하여 평화 대화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농촌 지역은 대체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데, 친인척 간 입소문으로 소식을 전해 듣는 경우가 많았다.

*“텔레비전이 있고 전기가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다. 일부 지역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소식을 들을 수 없다. 도시에 방문했다가 정보나 소식을 듣고 자기 동네로 돌아가서 정보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sup>17</sup>*

*“북에서 평화 대화 소식을 선택적으로 전했다고 느꼈다.”<sup>18</sup>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항 활주로에*

<sup>15</sup> KOR/19/0044.

<sup>16</sup> 대한민국이나 중국에 이미 수년간 거주해 온 이탈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최근 이탈한 이들에 비해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었다.

<sup>17</sup> KOR/19/0044.

<sup>18</sup> 이탈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할 때 “북조선” 또는 “북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던 방문 소식을 들었다. 남측<sup>19</sup>대통령이 여러 관계자를 만나는 사진과 영상을 보여줬다. 아나운서가 양측이 만난 장소에 대한 소식을 전하면서 통일이 곧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sup>20</sup>

평화 프로세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중요한 정치적 변화이지만, 일부 이탈자는 대중, 특히 빈곤하거나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은 매일 생계를 꾸려나가는 일을 더 걱정할 뿐,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은 자국의 미래가 어떨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탈자에 따르면, 대중은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매일 생계를 꾸려야 하는 자신의 상황은 별달리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측 주민은 생계에만 관심이 있다. 장마당에 가서 물건을 팔 때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으나만 생각한다. 평화 프로세스나 평화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 정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생각할 시간이 없다.”<sup>21</sup>

“사람들은 북이 개방을 하더라도 당 간부나 이득이 되지 일반 대중에게 득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sup>22</sup>

이탈자 대다수는 평화와 통일,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일부 이탈자는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선군정책 때문에 대중이 힘들다고도 말했다. 또한 선군정책 때문에 민간 행정이나 정책 결정에서도 군의 역할은 더욱 강화됐고, 그 결과 제도적으로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한정된 자원을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쓰기를 바랐다.

“정부는 선군정책을 말한다. 하지만 선군정책이 국민에게 해를 끼친다면 무슨 소용이 있나? 군 인조차도 힘들다. 영양실조 때문에 굶주려서 사망한다. 정부는 핵 개발에 자원을 모두 쓰고 투자한다. 그래서 비핵화는 민감한 문제다. 다른 나라가 핵무기 없이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 국민을 희생해가면서 핵무기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sup>23</sup>

“핵무기에 쓰이는 돈을 국민 복지를 위해 쓰는 편이 낫다.”<sup>24</sup>

<sup>19</sup> 이탈자는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 “남조선” 또는 “남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했다.

<sup>20</sup> KOR/19/0038.

<sup>21</sup> KOR/19/0010.

<sup>22</sup> KOR/19/0045.

<sup>23</sup> KOR/19/0021.

<sup>24</sup> KOR/19/0022.

## b) 통일

*“남북 간 교류는 필요하다. 교류 없이 통일은 불가능하다.”<sup>25</sup>*

향후 남북 통일에 대하여 물었을 때 이탈자 대다수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하지만 남북 간 정치 및 경제적 격차가 상당하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할지에 의문을 표했다.

이탈자 대다수는 남북 국민 간 통일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탈자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통일이란 대한민국을 흡수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반면 이들이 보기에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통일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치 제도로 남북을 통합하는 것이다.

일부 이탈자는 남북 정치 지도층이 현재 환경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적인 차원의 통일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이탈자는 통일을 조금 더 솔직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말했다.

*“남북 모두 한 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여 통일이 된다고 믿고 있다. 통일 전에 조건이 맞아야 한다. 북이 흡수되길 바랄 리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통일을 하고 싶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전하는게 먼저다. 정치 지도층이 제시하는 통일의 개념이 너무 이상적이다. 통일은 남북 모두가 동일한 정치 제도로 돌아갈 때 가능하다. 남측은 여러 정당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북측이 남측의 여러 정당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제도에 편입될 의지가 있을지 잘 모르겠다.”<sup>26</sup>*

일부 이탈자는 정치적 통합 이전에 경제적 통합과 인적 협력 확대가 선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통일에 앞서 민주적으로 사회 및 경제 개혁을 하도록 합의하길 바랐다. 또한 남북의 사회·경제적 통합이 경제 발전의 기회를 창출하고 법치주의, 바람직한 거버넌스, 인권 등을 개선할 수 있고, 향후 정치적 통합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탈자는 재통합 과정 단계별로 대중과 협의하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자는 통일을 위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로는 안보, 정치, 경제적으로 남북 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일 국가, 단일 제도는 불가능하다. 일단은 연방제로 운영하면서 국경은 유지하되, 경제적 교류는 있어야 한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북측이 민주주의에 익숙해지고 경제가 발전하면, 남북이 단일 제도로 통합될 수도 있다. 그 전에는 불가능하다.”<sup>27</sup>*

<sup>25</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2일).

<sup>26</sup> 이탈자 면담(2019년 6월 25일).

<sup>27</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8일).

“북측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더라도, 일정 기간 발전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남측이 통일을 주도한다면, 북측 주민과 정부 모두 남측과 마찰이 있을 것이다. 북측이 자체적으로 발전하고 민주적으로 바뀔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sup>28</sup>

### c)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

“북에서 정의 실현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나조차도 정의 실현이라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sup>29</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겪은 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바를 이탈자와 논의했다. 일부 이탈자는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 개념을 처음 접하고 관련하여 확고한 의견이 없었다. 또한 일부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가 제한되고 법치주의가 준수되지 않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은 당국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정의 실현이나 책임 규명의 가능성조차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일부 이탈자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 당국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자신들이 법을 어겼다고 생각했고, 법집행담당자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더라도 법의 소관이라고 봤다. 한편 일부 이탈자는 제한적이거나 정부 관계자가 저지른 침해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도 말했다.

“대부분은 자신의 권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해서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기 보다는 권리를 침해받더라도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인다. 정부를 비판하는 일은 위험하고 허용되지 않는다. 많은 이들이 느리게나마 점점 [자신의 인권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물론 갈 길이 멀다.”<sup>30</sup>

“사람들은 법을 모르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당국이 부여한 혐의를 그냥 수용한다. [법을] 배울만한 동기가 없다.”<sup>31</sup>

어떤 책임 규명 메커니즘이 정의 실현과 책임 규명에 가장 적절할지 물었을 때, 일부 이탈자는 책임 규명 메커니즘이 어떤 절차인지 알지 못했고, 또 일부는 과거 인권 침해를 다룰 때 특정 맥락을 고려할 필요가

<sup>28</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5월 2일).

<sup>29</sup> KOR/19/0010.

<sup>30</sup> KOR/19/0021.

<sup>31</sup> KOR/19/0022.



있다고 언급했다. 가령 이탈자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 및 조선로동당 당원 가운데 많은 수가 인권 침해에 관련됐기 때문에, 범죄 행위 모두를 처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다수 하급 정부 관계자는 상사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을 한 사람이 많다. 하지만 대체로 명령을 따른 것뿐이다. 우리에게 이려면 [인권을 침해하면] 안된다는 것을 알지만 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sup>32</sup>*

일부 이탈자는 특히 인권 침해 피해자는 심각한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가해자 처벌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를 실현하려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믿었다.

*“아직도 인권이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던 때를 돌이켜 생각해보면 [당국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sup>33</sup>*

<sup>32</sup> KOR/19/0023.

<sup>33</sup> KOR/19/0029.

*“남편을 감옥에 보낸 사람 모두 처벌 받길 바란다.”<sup>34</sup>*

*“나를 취급한 담당자들이 모두 벌로 일자리를 잃었으면 좋겠다.”<sup>35</sup>*

*“과거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 안 그러면 새로운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sup>36</sup>*

일부 이탈자는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법 및 조직 구조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되려 침해를 부추긴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문제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이탈자는 조선로동당 고위급 관계자와 지도층이 만연한 인권 침해에 책임을 지고 인권 개혁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부 이탈자는 인권 침해 피해자와 가족이 향후 진실 및 책임 규명 절차에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인 진실 규명, 정의 실현, 개혁은 수십 년이 걸려야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하며, 다만 이런 조치가 화해와 지속가능한 평화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진실 규명은 필수라고 생각한다. 진실 규명 없이 화해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진실 규명 없이는 누가 처벌을 어느 정도로 받을지 결정할 수 없다. 국제법을 근거로 인권 침해를 처벌할 수 있다.”<sup>37</sup>*

*“복은 예외없이 과거 문제를 다뤄야 한다. 화해가 먼저고 다음에 과거를 논해야 한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을 억압 속에 살았다. 이들에게 과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화해란 있을 수 없다.”<sup>38</sup>*

*“과거를 어느 정도로 다룰지에 있어 피해자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 과정 자체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여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수 세대가 혹은 수십 년이 걸릴 수 있고 점진적으로만 이뤄질 수 있다.”<sup>39</sup>*

<sup>34</sup> KOR/19/0030.

<sup>35</sup> KOR/19/0049.

<sup>36</sup> 이탈자 면담(2019년 6월 25일).

<sup>37</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2일).

<sup>38</sup> 상동.

<sup>39</sup> 상동.

## VI. 평화를 위한 인권 기반 다지기

본 장은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면담한 이탈자가 보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의 주요 동인이 무엇인지를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인권 침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울러 평화, 안정, 법치주의의 근간을 마련하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이들의 의견을 담았다.

### a) 평등과 비차별 증진

*“당이나 정부에서 일하려면 배경이 좋아야 한다. [한국]전쟁에서 [대한민국이나 외부 세력을 도와] 싸웠거나 예전에 가족이 지주였다면 정부나 당에서 일할 기회가 없다. 제도 자체가 일반 노동자의 자식은 일반 노동자로 일하고, 당원의 자식은 당원으로 일하는 방식으로 생겼다.”<sup>40</sup>*

이탈자는 성분에 따른 차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로 꼽았다.<sup>41</sup> 성분이 좋은 평양 거주자는 다른 도시나 시골에 사는 거주자보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고 강조했다.<sup>42</sup> 또한 정부와 당 관계자는 능력이 아닌 성분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발된다고 했다. 그 결과 정실주의가 자리잡고 정부 관계자가 국민의 인권이나 이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지도층을 만족시키는 것에 주력하게 된다.

대체적으로 성분이 좋은 국가 공무원이 자신의 행위가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소외된 가족과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가령 구금 권리가 전혀 보장되지 않고, 정부 관계자의 부정부패가 발생하며, 재판 시 경범죄에 과도하게 가혹한 형을 내리는 상황 등이 있다. 이탈자는 정부가 국민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성분 제도를 철폐하고 능력에 따른 제도로 대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분이 나쁘면 사법부를 비롯하여 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 가족 배경이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sup>40</sup> KOR/20/0001.

<sup>41</sup> 성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을 국가 차원에서 분류한 제도이다. 정부에 대한 충성 정도를 평가하고 가족 배경과 가족의 행적을 바탕으로 분류한다. 국민을 크게 핵심, 동요, 적대 세 범주로 분류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성분 제도가 실제 사용되지 않으며, 국내법은 평등과 비차별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 유엔 조사위원회(2014) 보고서는 성분 제도가 구조적 차별을 초래한다고 결론냈다.

<sup>42</sup> 조선 중앙통계국이 유엔아동기금의 지원으로 2017년 시행한 다중지표군집조사(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MICS)에서도 출된 경제 및 사회 관련 자료는 평양과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 간 사회 및 경제 격차가 상당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사법부 종사자는 자신이 마땅히 어떤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냥 직업일 뿐이다. 일반 시민은 사법부 판단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만, 정작 사법부 종사자는 이해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발탁되어야 한다.”<sup>43</sup>

“성분이 좋으면 경력을 쌓기 수월하다.”<sup>44</sup>

일부 이탈자는 부패가 만연하여 성분뿐 아니라 뇌물 지급 능력 정도에 따라서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한 이탈자는 성분이 나쁜 빈곤층은 사실상 이종으로 소외되는 격이라고 말했다.

이탈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게 여겨진다고 진술했다.<sup>45</sup> 최근 몇 년간 대부분 가정에서 여성이 가장으로 역할하게 됐지만, 뿌리깊게 자리잡은 차별적인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의 기여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했다. 이탈자는 가정폭력이 만연하다고 언급하며,<sup>46</sup> 여성이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없다고 했다. 한 이탈자는 여성이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거나 경찰에 보호를 요청하는 일은 없는데, 사회적으로 만연한 부정적 인식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상황이 심각해도 마찬가지이다. 이탈자는 정부가 법으로, 그리고 실제로 젠더 평등을 보장해야 하며, 모든 형태의 성 및 젠더에 따른 폭력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자와 여자가 받는 대우가 다른 것 같다. 북에서는 여성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주로 한다. 남자는 여자만큼 일을 하지 않는다. 남자는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가족구성원 가운데 권위를 갖는다.”<sup>47</sup>

“나도 가정폭력 피해자다. 남편이랑 계모가 구타했다. 안전원은 가정폭력 건에 개입하지 않는다. 심각한 건이라면 안전원이 인민반 총화 때 와서 가정폭력을 휘두르지 말라고 조언한다. 정부는 심각한 건이라도 여자한테 해주게 없다. 아내가 심각하게 맞아서 움직일 수도 없을 지경이더라도 병원에 가기보다 집에 있으려고 한다. 가정폭력 건일 때 병원에 가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sup>48</sup>

“북측은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주장은 맞지 않는다. 북측은 구조적인 문제는 인지하지 않고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문제를 논의하려고도 않는다. 젠더 기준을 높이도록 논의하는 국가 기구가 없다. 녀맹이 있긴 하지만, 젠더 평등을 도모하는 조직이 아

<sup>43</sup> KOR/19/0032.

<sup>44</sup> KOR/19/0007.

<sup>45</sup> 여성권리보장법(2010)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7년 최종권고에서 가정 및 사회 내 여성과 남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인 고정관념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sup>46</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면담한 이탈자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 마약 남용, 가부장적인 태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가정폭력에 기여한다.

<sup>47</sup> KOR/19/0045.

<sup>48</sup> KOR/20/0005.

나라 시민을 통제하는 조직이다. 또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여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 정부는 피해자가 경험을 공유해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따라서 젠더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sup>49</sup>

## b) 경제권 및 사회권 보장

“내야 하는 것은 더 늘었지만 경제 활동은 더 줄었다. 대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숨 막혀 죽을 것이다. 작년에 농업 생산성과 상업 활동은 모두 줄었다. 굶어 죽는 사람이 늘었다.”<sup>50</sup>

이탈자 다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고용 및 경제 활동 기회 부재가 인권 침해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가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지만 국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며, 합법적으로 돈벌이가 되는 경제 활동을 영위하도록 허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sup>51</sup> 이탈자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 정부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뇌물을 줘야 하며, 뇌물을 주었더라도 사업을 하다가 자의적으로 구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관계자가 뇌물 액수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나 지도층에 보여주기 식으로 불법 시장 활동을 단속하는 경우가 있다.

한 이탈자는 과도한 통제와 경제적 지원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북은 국가 배급 제도가 잘 돌아가지 않고 그렇다고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하지도 못한다. 국가 기업소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이 정치 때문이라고들 사람들이 말한다. 예를 들어 국민에게 식량 배급을 준다면 당국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을 통제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이] 물품을 통제하면서 국민에게 식량도 안 주는 것은 말이 안된다.”<sup>52</sup>

일부 이탈자에 따르면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여성은 성착취에 취약하다. 시장 내 거래 허용을 대가로 지역 법집행담당자나 시장 관리자가 여성에게 뇌물뿐 아니라 성상납도 요구한다고 한다.

일부 이탈자는 도시와 지방 간 경제 격차도 강조했다. 이들에 따르면 중국과 국경을 접한 도시에 비해 지방 경제 상황은 좋지 않다. 지방은 농사를 짓거나 약초를 캐는 일 등이 주요 경제 활동인데 비해 북중 국

<sup>49</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2일).

<sup>50</sup> KOR/19/0032.

<sup>51</sup> 더 자세한 정보는 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참조(2019년 5월).

<sup>52</sup> KOR/19/0031.



경 도시는 무역이나 밀수 등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다. 최근 몇 년간 농업 수확량이 생계 유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걱정을 표했다. 일부 이탈자는 2019년 초부터 정부가 환경을 우려하여 산악 지대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다고도 언급했다. 지방 거주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몇 년 사이에 기아를 겪을 위험이 있다고 했다.

*“량강도 헤산시는 중국이랑 가깝다. 사람들이 밀수를 해서 생계를 꾸린다. 반면 내가 태어난 곳은 외딴 시골이어서 거기 사람들은 생계를 꾸리기가 어렵다.”<sup>53</sup>*

*“농장에서 일하더라도 가을 추수 때 제대로 된 분량의 식량을 받지 못한다. 대신 사람들이 산에 가서 약초를 캐고, 약초를 팔아서 쌀을 산다. 충분하지는 않다. 식량 사는 일이 쉽지가 않다.”<sup>54</sup>*

이탈자 다수는 경제 활동을 독려하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전반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포를 두려워 하거나 당국에 뇌물을 줄 필요 없이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무역 개방과 관련된 조치만이 아니라 시장 및 기업 활동이 더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sup>55</sup>*

<sup>53</sup> KOR/19/0034.

<sup>54</sup> KOR/19/0036.

<sup>55</sup> 이탈자 면담(2019년 6월 2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개혁 개방을 거쳐야 한다. 국경을 개방해서 국민이 밀수가 아닌 합법적인 무역을 할 수 있어야 한다.”<sup>56</sup>

### 국가의 강제 직장 배정

“우리는 일을 하고 싶을 때조차도 일로써 잠재력을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인간답게 대접을 받지 못한다. 행복하지 않고 항상 두렵기만 하다. 사람들은 탈북하고 싶어한다. 삶이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해결하려면 탈북하거나 죽는 수 밖에 없다. 살아 있긴 하지만 정체성 없이 산다.”<sup>57</sup>

이탈자 거의 모두는 국가가 강제로 직장에 배정하기 때문에<sup>58</sup> 금전적 부담도 가중되고 경제적 기회를 누리지도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탈자 설명에 따르면 일을 해도 임금을 전혀 혹은 거의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배정한 일자리에만 종사해서는 가족이 하루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고 한다. 게다가 임금도 주지 않는 국가 배정 직장에 나가지 않으려면 정부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했다. 일부 이탈자는 국가가 직장을 배정하는 제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지만, 국민들로부터 돈을 계속해서 착취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국가 동원 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공장에 일이 없다. 공장에서 할 일이 없다. 공장에서 일한다고 돈을 받지도 못한다. 정부에 돈을 내려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을 내라고 하면서 동시에 동원도 한다. 둘 다 할 수는 없다.”<sup>59</sup>

“매일 노력 동원이 있다. 동원에 나가지 않으려면 작업 종류에 따라서 하루에 5위안 내지 10위안 정도를 내야 했다. 장마당에서 정해진 시간에 장사를 하긴 하지만, 강제 노동을 하지 않으려면 돈도 내야 했다.”<sup>60</sup>

한 이탈자는 국가가 직장을 배정하는 제도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기본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를 유지하는지 설명했다.

“노동권 문제는 정치적 문제이다. 왜냐하면 돈을 아무에게도 주지 않으면서 제도를 유지할 수 있

<sup>56</sup> KOR/19/0046.

<sup>57</sup> KOR/19/0022.

<sup>58</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은 국민 모두에게 국가가 직장을 배정하여 취업을 보장한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으며 국가 강제로 배정한 직장은 보수를 제공하지 않는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최종권고 보고서(2003)에 국가가 직장을 배정하는 제도가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직업 또는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sup>59</sup> KOR/19/0021.

<sup>60</sup> KOR/19/0046.

게 하기 때문이다. 실제 자본주의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직장 배정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방법이고, 국가에 기댈 수 밖에 없도록 만든다.”<sup>61</sup>

일부 이탈자는 기혼 여성은 국가가 직장에 배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이하 “녀맹”) 주도 하에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건설이나 소규모 동원에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sup>62</sup> 기혼 여성이 이미 가사일을 담당하고 자녀를 돌보며 가족 생계를 위하여 비공식 부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 동원으로 부담이 가중된다.

이탈자는 국가 직장 배정 제도를 정부가 즉각 철폐하고, 개인의 관심사와 기술에 따라 직업을 자유롭게 고를 수 있도록 허용하며, 해외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심사, 역량에 따라 일을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전혀 관심없는 일을 하도록 동원해서는 안된다. 돈을 벌러 외국에 갈 수도 있어야 한다.”<sup>63</sup>

“국가 기업소는 월급을 주거나 일을 한 대가를 줘야 한다. 정부는 사람들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장사뿐 아니라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sup>64</sup>

### 과도한 현금 및 현물 기여 요구<sup>65</sup>

“국가를 지원하라고 하지만, 지원할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도울만한 아주 기본적인 조건도 보장 받지 못하고, 받는 것이 없다. 국가 정책 때문에 삶이 불행하고 힘들다.”<sup>66</sup>

이탈자 대다수는 인민반, 녀맹, 군, 교도소, 학교, 고아원 등에 정기적으로 현금이나 현물을 제공하도록 요청받았다고 지적했다. 원칙적으로는 자발적 기여이지만, 사실상 의무와 다를바 없다. 현물이나 현금을 내지 않으면 감시를 받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탈자에 따르면 이미 금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국가에 내야하는 기여금은 부담을 지운다.

“국가에 내야 할 것이 많은데, 금전적으로 부담이다. 경제가 개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활기가 없고, 삶의 질이 점점 떨어진다. 백두산의 길을 따라 가면 복에 남는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렇

<sup>61</sup> 이탈자 면담(2019년 6월 25일).

<sup>62</sup> 국가는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에 속한 기혼 여성은 직장에 배정하지 않는다.

<sup>63</sup> KOR/20/0009.

<sup>64</sup> KOR/19/0032.

<sup>65</sup> 현물 기여는 여러 물품을 포함한다. 가령 정부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담배,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량, 겨울에 학교에 제공하는 화목, 정부 기관에 제공하는 문구류 및 가구 등이 있다.

<sup>66</sup> KOR/19/0022.

게 하면 굶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두만강 길을 따르면 (중국으로 이어지고) 그래야 살 수 있다. 북에서는 미래가 없다.”<sup>67</sup>

“시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낼 것이 아주 많다. 모두 정치적 대의를 위한 것이고 강제로 내야 한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힘들다. 못 내는 사람들은 감시를 받고 결국 문제가 생길 것이다.”<sup>68</sup>

일부 이탈자는 학교나 의료 시설에 지불하는 과도한 현물이나 현금 기여가 교육권과 보건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북에서 원칙적으로는 무상 의료가 제공된다. 하지만 실제 의사는 환자가 금전적으로 뭔가를 주고 나서야 검진을 한다. 의사와 의료 종사자는 정부로부터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해서, 환자가 내는 것에 주로 기대어 생활한다.”<sup>69</sup>

“아들이 11살인데, 학교에서 매일 돈을 내라고 했다. 학교에서 학생이 필요한 우선적인 이유는 학생을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컴퓨터를 설치하는 등의 일을 할 때 학생한테 얼마를 내라고 한다. 학교는 학생한테 돈을 못내면 수업을 못 듣는다고 말한다.”<sup>70</sup>

일부 이탈자는 정부가 국가를 운영하려면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동시에 국민이 수입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탈자는 정부가 시시때때로 금전적 기여를 요구하는 것을 일절 중단한다면 많은 시민들이 세금을 낼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이탈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천연자원을 남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천연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길 희망했다.

“북에 자원이 많다.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고 남북간 거래를 한다면 사람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아서 안타깝다.”<sup>71</sup>

### c) 기본적인 자유와 법치주의 보장

“당국이 너무 통제를 많이 한다. 그만 해야 한다. 사람들을 자유롭게 뉘야 한다. 북 지도층 명령은

<sup>67</sup> KOR/19/0041.

<sup>68</sup> KOR/19/0022.

<sup>69</sup> KOR/20/0001.

<sup>70</sup> KOR/19/0048.

<sup>71</sup> KOR/19/0028.

*따지지도 않고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sup>72</sup>*

이탈자 대다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법치주의가 준수되지 않고 기본적인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융통성 없는 법 해석, 자의적 체포와 구금, 기본적인 자유 제한 등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이탈자는 또한 정치적 영향력, 성분, 대내외 정치적 상황, 정부 관계자에게 뇌물을 줄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차별적으로 법이 적용된다고도 언급했다. 법이나 정책이 항상 공개되지도 않고 정부 관계자 재량권이 상당하여 권력 남용에 용이하다고도 언급했다. 이탈자는 정부 관계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는데,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이다.

*“현 제도상으로는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국경을 건너가도록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로 중국에 전화를 딱 한 번만 해도 로동교화형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이 [국경을] 건너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를 보호하려고 한다.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sup>73</sup>*

한 이탈자는 경범죄에도 법이 가혹하게 적용된다고 불만을 전했다.

*“경범죄로도 체포되고,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법집행담당자가 단속할 때도 있다. 지도층이 경범죄에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방 정부 관계자는 법을 융통성 없이 가혹하게 적용한다. 헌법에 인권을 보장한다고 쓰여있지만 인권 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국내법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다.”<sup>74</sup>*

일부 이탈자는 정부가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존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이 정치 지도자를 뽑을 때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의미한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일부 이탈자는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더 잘 알아야지만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탈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에서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받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북에서 법치주의를 논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국민에게 더 많은 선택권과 자유를 주는게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뭘 입고, 누굴 만나고, 어디로 여행 가고, 어떤 영화를 보*

<sup>72</sup> KOR/19/0033.

<sup>73</sup> KOR/19/0041.

<sup>74</sup> KOR/19/0007.

고, 어떤 음악을 듣는지 등 이런 자유가 모두 보장되어야 한다. 지도자를 투표로 뽑을 수도 있어야 한다. 일상을 영위하면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sup>75</sup>

“일반 대중을 위한 법치주의나 좋은 거버넌스를 생각한다면 로동당이 모두 독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보위부\*는 국민을 감시하지 말아야 한다.”<sup>76</sup>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가치있는 사람인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정부가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정보를 접할 수 없게 만들어서, 사람들은 속거나 조종을 당하거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sup>77</sup>

### 부정부패 및 권력 남용

이탈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부패와 권력 남용이 만연한 점에 불만을 표했다. 법집행담당자 거의 모두가 형사 건 관련하여 뇌물을 착취한다고 언급했다. 일부는 돈이 있는 사람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경범죄로도 징역형을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는 법집행기관이 자신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합법한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탈자는 법집행담당자의 만연한 부패는 법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는데, 이러한 모호성 덕분에 정부 관계자가 뇌물을 주지 못한 사람을 임의로 체포, 구금 및 기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sup>78</sup>

한 이탈자는 돈으로 정의를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북에서는 돈이 중요하다. 뇌물로 뭐든 살 수 있다. 돈을 내면 김일성대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다. 정의도 살 수 있다. 마약 10kg을 팔더라도 돈을 내면 쉽게 빠져 나올 수 있다. 당국이 뇌물을 받는다. 구역 지방 검사가 형사 건 관련해서 뇌물을 받는다. 돈이나 연줄이 없는 사람들만 고통 받는다.”<sup>79</sup>

### 이동의 자유

“국외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된다면 돈을 더 잘 벌 수 있을 것이다. 북에서는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다. 산업 모두가 중단됐다.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에 자유롭게 갈 수 있다면 더 열심히 일

<sup>75</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2일).

\* (번역주) 공식부처명은 “국가보위성”이나 면담 시 “국가보위성”을 “보위부”로 칭한 사례가 많고, 이를 그대로 두었다.

<sup>76</sup> KOR/19/0047.

<sup>77</sup> KOR/19/0023.

<sup>78</sup> 더 자세한 정보는 권리의 대가(代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의 침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참조(2019년 5월).

<sup>79</sup> KOR/19/0032.





*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경제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sup>80</sup>*

이탈자는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정보를 주고 받고 사회 생활을 하거나 해외 상황에 대해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sup>81</sup> 다른 도(都)로 이동하려면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탈자는 응급 의료 상황이거나 친척을 방문하거나 장사가 아닌 다른 사회 활동 목적으로는 여행 허가를 받기가 좀 더 용이하다고 말했다. 평양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특히 여행 허가를 받기가 어렵다. 여행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연없이 허가를 받으려고 뇌물을 주는 경우가 빈번하다.

*“돈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뇌물을 주면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sup>82</sup>*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할 때는 항상 담당자 뇌물로 담배 한 갑을 가져갔다.”<sup>83</sup>*

일부 이탈자는 해외 여행을 승인 받을 수는 있지만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sup>84</sup> 상당 수 사람이 매일

<sup>80</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2일).

<sup>81</sup> 조사위원회(2014)도 이동의 자유 제한 정책이 정보 흐름을 제한하고 지배 계층이 혜택을 받는 차별적인 거주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결론내렸다.

<sup>82</sup> KOR/019/0004.

<sup>83</sup> KOR/019/0007.

<sup>84</sup> 형법 제 221조는 불법 월경을 범죄로 규정하여 1년 미만의 로동단련형,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미만의 로동교화형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중국으로 넘어가 물건을 사고 팔거나 일자리를 찾거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아예 뜨기도 한다.<sup>85</sup> 면담 대상자들은 국경을 건너는 여성이 특히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강조했다.<sup>86</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 시설 구금자 다수는 불법 월경 때문에 형을 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동의 자유 제한을 즉각 완화하고, 국민이 여행, 학업, 기타 경제 및 사회적 목적으로 국내외 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길 희망했다. 또한 여성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우선적으로 북 주민이 원하면 자유롭게 이동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sup>87</sup>*

*“경제 고립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려워졌다. 이게 변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는 것만이 답이라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하다. 체포되면 교화소에 가야 한다. 교화소에 구금됐던 사람이라면 언제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려고 시도할 것이다.”<sup>88</sup>*

### 의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성

*“북에 있을 때는 누가 됐던 지도자에 대해서, 혹은 국가 운영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다. 부정적으로 말을 하면 정치범 수용소에 갈 것이다.”<sup>89</sup>*

이탈자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 다수는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아주 제한적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이다. 정보는 예외없이 모두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하고, 당국은 국민의 외국 영화, 음악 및 매체 접근 시도를 주기적으로 단속한다.

*“109 상무<sup>90</sup>는 북 공영 방송에 나오지 않는 외국 영화를 보는 사람을 단속한다. 109 상무에 체포되면 아이들도 구타를 당하고 감옥에 간다.”<sup>91</sup>*

일부 이탈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시장이 상행위뿐 아니라 정보 교환의 장으로 상당히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장사를 하면서 상호 소통이 증가하고, 외부 저장 장치나 휴대전화를 통해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해지면서 사람들이 정부가 하는 이야기 모두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점차적으로 이해하게 됐다. 일부 이탈자는 젊은이들이 특히 기본적인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이유를 납득하길 어려워 한

<sup>85</sup> 장사 혹은 무역에 종사하는 대다수는 여성이고, 따라서 거의 매일 국경을 건너는 여성이 많다.

<sup>86</sup>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2018년과 2019년에 대한민국에 도착한 여성 636명을 면담했다. 면담 결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중국으로 간 여성 다수는 중국 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대가로 매매 결혼 혹은 성 착취를 당했다.

<sup>87</sup> KOR/19/0036.

<sup>88</sup> KOR/19/0044.

<sup>89</sup> KOR/19/0013.

<sup>90</sup> 109 상무는 여러 법집행담당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별도 조직으로, “반사회주의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매체 시청 및 배포를 단속한다.

<sup>91</sup> KOR/19/0009.

다고 지적했다. 이탈자는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제한이 철폐되어야 하고, 정부가 국민이 제시하는 건설적인 제안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마당에서 정보가 도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북에서 나올 때는 굶주림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젊은 북 주민들은 굶주림으로 죽을 것 같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유가 없어서 북을 나온다. 외부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북에서 통제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은 것이다.”<sup>92</sup>*

*“거주 지역에 따라 인식에 차이가 있다. 국경 지대는 주민이 외부 정보 접근이 좀 더 용이하지만 남쪽 지역과 내륙 지역은 외부 정보 접근이 제한적이고 주민들이 세뇌 당해서 당국이 말하는대로 믿는다.”<sup>93</sup>*

#### d) 구금 및 교도소 개혁

*“...목 뒤로 손깍지를 끼고 앉았다 일어서기를 시키는 벌을 주기도 했다. 가족 면회도 없었고 건강 검진도 없었다...”<sup>94</sup>*

이탈자 다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구금을 경험했다. 구금자는 조사나 처벌을 받으면서 제도적으로 고문과 학대를 당한다. 여성 대상 성폭력이 만연하며, 구금 환경은 비인도적이며 과밀화 상태로 위생도 좋지 않다. 이탈자는 또한 여성 구금자의 성 및 재생산 관련 권리는 존중되지 않고 구금자는 강제 노동에 시달린다고도 언급했다.<sup>95</sup> 이들은 구금 환경과 구금자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형법을 수정하여 국경을 건너거나 장사를 하거나 해외 전화를 송수신하는 등과 같은 경범죄로 과도한 형을 받지 않고, 투옥을 대신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이탈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소한 범죄를 너무 심하게 처벌한다. 자비가 없다. 경고를 한다거나 사회 교양을 하는 등의 절차가 없다. 항상 무거운 형을 때리거나 강제 노동을 시킨다...”<sup>96</sup>*

일부 이탈자, 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 상황 관련 일을 하는 이들은 국제공동체가 참여하는 독

<sup>92</sup> KOR/19/0023.

<sup>93</sup> KOR/19/0023.

<sup>94</sup> KOR/19/0010.

<sup>95</sup> 더 자세한 정보는 “여전히 고통스럽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권 침해”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 참조(2020년 7월).

<sup>96</sup> KOR/19/0041.



립적인 수감 시설 감시 제도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유엔과 국제공동체가 구금 시설 내 고문과 학대 금지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를 바랐다.

*“북에는 아직 고문 피해자가 많고, 정신적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도 많다. 국제공동체는 [북측] 당국에 구금 시설 내 고문을 중단하고 구금자를 지원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유엔이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up>97</sup>*

일부 이탈자는 정치범 수용소(관리소) 존재에 우려를 표했고<sup>98</sup> 정치범 수용소를 전면 철폐하고 정치범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는 또한 국가보위성이 인권 침해에 가담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개선에 있어 국가보위성 개혁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 e) 남북 및 비핵화 대화에 인권 의제를 포함해야 할 필요성

*“북이 해결해야 할 인권 문제가 상당히 많다. 정치범 수용소를 해체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여권을 발급하고, 국제 비정부기구가 상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개방하고, 연좌제를 철폐하는 등이 있다.”<sup>99</sup>*

<sup>97</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8일).

<sup>98</sup> 조사위원회(2014)에 따르면 정치범으로 수감된 이들은 의도적인 굶주림, 고문, 강제 노동 및 처형으로 목숨을 잃는다.

<sup>99</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연좌제에 따라 (3대에 이르는 조상을 포함하여) 가까운 친척이 정치범 죄를 저질렀을 경우 가족 전체가 처벌을 받는다. 과거에는 가족 전체가 수감됐으나, 최근에는 수감 대신 지방으로 추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탈자는,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문제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은 미국과 대한민국이 평화 외교를 추진하면서 인권 의제를 포함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했다. 미국과 대한민국이 비핵화와 경제 협력에 우선 순위를 둔 점을 알고 있으나, 인권에 우선 순위를 두는 것이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적 기회가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인권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대신 인권 상황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오랜 시간 지속성있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경제 및 사회 발전이 따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 프로세스 중에 인권이 전혀 논의되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 화해와 평화를 논의할 때 항상 사람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권은 심지어 핵무기 문제와 관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의제로 오르지도 못했다.”<sup>100</sup>*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북 이탈자로서 특히 실망스럽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미국과 대한민국 모두 북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상회담이 시작된 이후 인권 의제가 사라졌다.”<sup>101</sup>*

*“경제 협력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북 인권 문제도 제기되어야 한다.”<sup>102</sup>*

이탈자, 특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일을 하는 이들은 대한민국과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대화에서 인권을 우선시해주길 바랐다. 이탈자는 또한 미국과 대한민국이 대화 시 인권을 우선시하지 않으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먼저 나서서 해당국 내 광범위한 인권 침해를 중단할 조치를 취할 리가 없다고도 말했다.

*“인권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제안한다.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는 다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가 없고, 따라서 인권 문제를 반드시 강조해야 한다.”<sup>103</sup>*

*“북측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는 생각은 허상이다. 북측 내 인권 침해는 반인도범죄에 준하는 수준이다. 남측이 북측에 정치범 수용소를 사찰하고 비밀리에 운영되는 감옥을 철폐하고, 고문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이동의 자유, 거주 장소를 선택할 자유, 장사를 할 수 있는 자유 모두가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유가 보장 되어야만 경제 협력과 평화 대화를 시작할 수 있다.”<sup>104</sup>*

<sup>100</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8일).

<sup>101</sup> 상동.

<sup>102</sup> 상동.

<sup>103</sup> 상동.

<sup>104</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5월 2일).

이탈자는 지체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여타 인권 문제도 강조했다. 가령 가족 이산 문제 해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외국인 석방,<sup>105</sup> 한국전쟁 중과 휴전 후 납치된 대한민국 국적자 관련 진실 규명 조치를 취하는 등의 문제를 포함한다.

“인권에 있어 모든게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있다. 가족 이산 피해자가 점점 나이가 들고 세상을 뜨고 있다. 따라서 가족 이산 피해자가 만날 수 있어야 한다. KAL기 납치 때 납북된 아버지는<sup>106</sup> 살아 계시긴 하지만 이미 연세가 많이 드셨다. 북은 이런 문제를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 북이 이런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다른 인권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믿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sup>107</sup>

“정치범 수감자 생사 여부 확인과는 별개로 교도소에서 사망하고 가족에게 유해가 전달되지 않은 사례가 많다. 더하여 북으로 납치된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데 이들 소재 파악이 중요하다. 국제 공동체와 유엔은 즉각 결과를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해당 인권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북을 압박해야 한다.”<sup>108</sup>

이탈자는 또한 대화가 참여를 도모하며 포용력있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시각을 대변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미국이나 대한민국과 대화를 할 때, 자국 국민에게 전체 과정이 드러나지 않도록 비공개로 하길 원했다. 결과만 알렸는데, 그마저도 왜곡된 내용이었다.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무역 관련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낙관이 있었는데, 이러한 기대도 사실 선전선동의 결과이다. 대화 과정 전체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 대중에게 공개된다면, 정부는 아마도 국민의 의견을 보다 중시하고 귀기울일 것이다.”<sup>109</sup>

<sup>105</sup> 목사 세 명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국적자 최소 여섯 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구금되어 있다.

<sup>106</sup> 승무원 4명과 승객 46명이 탑승한 대한항공 여객기는 1969년 12월 대한민국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납치됐다. 1970년 2월 14일 승객 39명은 송환됐으나, 승무원과 나머지 승객 7명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sup>107</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5월 2일).

<sup>108</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4월 18일).

<sup>109</sup> 표적집단토론(2019년 5월 2일).

## VII. 결론

이탈자는 개별 면담과 표적집단토론을 통해 평화 프로세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가장 시급한 인권 문제, 정부와 국제공동체에 바라는 기대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이탈자는 현재의 평화 대화가 한반도 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에 중요하다고 보는 한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내외에 거주하는 해당국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표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게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오랜 기간 해결되지 않은 인권 문제를 논하지 않는 것이 특히 우려스럽다. 분쟁과 학대의 원인을 간과하는 결과를 낳고 지속가능한 평화 전망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다.

면담 대상 이탈자는 전방위적인 개혁을 통해서만 법치주의, 인권 및 기본 자유 존중, 비차별, 젠더 평등, 경제 성장, 적절한 생활 수준 제공 등의 바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했다. 포용적이고 인권을 중심에 둔 평화 프로세스만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담보하는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아울러 국제공동체가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와 개혁을 옹호하고 지원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 VIII. 권고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에 다음을 권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다섯 개 주요 국제 인권 조약 당사국으로, 해당국 정부는 국제인권법 상 국민 모두가 기본적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책적 개혁을 이행해야 할 구속력 있는 법적 의무가 있다.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이탈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권고를 제시한다.<sup>110</sup> 별첨에 제시된 해당 권고는 모든 것을 망라한 것은 아니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변화를 시작할 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 국제공동체에 다음을 권고한다.

국제공동체는 별첨에 제시된 권고를 기준으로 삼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제시한 인권 개선 약속을 평가하고, 관련하여 개선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다음을 권고한다.

- 한반도 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평화 또는 비핵화 대화와 협력에 인권을 중심에 두도록 한다.
- 노동권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포함하여 인권을 근간에 둔 틀(framework)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경제 및 인도적 협력에 반영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개선에 기여하려는 시민사회단체 노력을 지원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과거 인권 침해 및 현재 자행되고 있는 침해에 대한 포괄적인 책임 규명 절차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sup>110</sup> 해당 권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을 포함하여 여러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제시한 권고를 포함한다. 또한 52개 시민사회단체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2018년 6월 제시한 권고도 고려했다. 해당 권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며 포괄적인 개혁을 개시하도록 촉구한다. <https://www.hrw.org/news/2018/06/06/joint-letter-human-rights-watch-and-ngos-kim-jong-un>



**앞서 제시한 권고에 더하여 대한민국과 미국에 다음을 권고한다.**

- 평화 및 비핵화 대화에 인권을 포함한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외에 거주하는 이탈자를 참여시켜 평화 프로세스가 포용력 있는 참여를 도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한다.

# 별첨

## 인권 기준

### i. 포용력 있는 평화 대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이 평화 프로세스에 유의미하게 참여한다면 더욱 포용력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고, 평화 프로세스의 정당성을 높이고 주인 의식을 확대할 수 있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의 전적인 참여를 보장하여 포용력 있고 참여를 도모하는 평화 프로세스를 마련한다. 여성과 지방을 포함한 소외된 공동체 출신뿐 아니라 장애인과 성분이 낮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소외된 공동체 출신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2.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3. 피해자와 유관 이해당사자와 책임 및 진실 규명, 정의 실현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협의를 시작한다.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오랜 기간 자행된 심각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려는 목적이다.

### ii. 평등 및 비차별

성분은 구조적인 차별을 낳았고, 공포와 배제를 통한 학대가 영구히 자리잡게 만들었다. 성분, 사회·정치적 지위 또는 젠더에 따른 차별은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전적인 향유에도 영향을 미쳤다.

4. 성분 또는 사회·정치적 지위에 따른 교육 및 채용 접근성 등을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차별을 중단한다.

5. 성분이 낮은 사람이나 지방 거주자를 반드시 포함하여 취약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한 집단을 사회·경제적으로 보호한다.
6.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중단하고, 법과 실제에서 젠더 평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한다.
7. 모든 형태의 성 및 젠더 기반 폭력을 범죄로 규정하고, 성 및 젠더 기반 폭력 피해자 및 생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며, 가해자에게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 iii.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를 포함한 경제 및 사회적 권리

경제 활동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국가가 직장을 강제로 배정하지만 보수를 제공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영위하려면 기여금과 뇌물을 지불해야 하며, 국가 배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정부는 전국민에 충분한 양질의 사회 및 경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거나 사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환경을 보장하지 못했다. 그 결과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경제권 및 사회권이 침해됐다.

8. 정당한 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한 직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경제 개혁을 시작한다. 국민이 국내외에서 안전하게 경제 활동 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
9. 국가 기업소가 보수를 제공하지 않고 강제로 노동력을 동원하지 않도록 하며, 강제 노동을 비법화하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10.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한다.
11. 인권을 바탕으로 하며 젠더를 세심하게 고려한 방식으로 경제 및 사회를 발전시킨다.
12. 유엔 부패 방지 협약을 비준한다.
13. 독립적인 국가 반부패기구를 설립하며, 이 때 효과적으로 부패를 척결하고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하는 데 필요한 권한, 재정 및 인력을 보장한다.

### iv. 기본적인 자유와 법치주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동의 자유, 의견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성과 같은 기본적인 자유를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제한한다. 경범죄만으로도 공정한 재판 또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옥된다. 부패가 만연하여,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당국에 뇌물을 지불해야 한다.

14. 기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법 규정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국내법이 국

제 인권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혁을 시작한다.

15. 독립적이고 공평한 사법부 정립을 포함하여 법치주의를 세우고, 적법 절차를 보장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사법 및 법 집행 관련 개혁 조치를 시작한다.
16. 국제공동체와 협력하여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롯한 국제 인권 조약에 따른 국가 의무를 준수하는 방향으로 형사 사법 제도를 조정한다.
17.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돌아오거나 송환된 이들을 변칙적으로 국경을 건넜다는 이유로 투옥 등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국외 정보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18. 일반 국민에게 인권 및 법 교육을 제공하고, 법집행담당자 및 여타 공무원에게 인권 교육을 제공하여 어떠한 차별도 없이 인권을 전적으로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

## v. 구금 및 정치범

구금 시설과 교도소 내 학대, 고문 및 성폭력이 여전히 만연한다. 구금 시설과 교도소 내 환경은 국제 규범과 표준을 따르지 않으며,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된 이들은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기간 투옥된다.

19. 최상위 권한을 가진 당국은 형법과 형사소송법 조항을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명령을 내려, 고문과 학대를 금지한다.
20. 국제공동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여 구금 시설 전반을 살피 구금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학대 및 강제 노동을 철폐하도록 한다. 경범죄에 투옥이 아닌 대체 방안을 적용하고, 미결 구금을 줄인다.
21.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고,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실종된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구금 시 사망한 이들의 유해를 가족에게 돌려준다.
22. 성폭력 건을 포함하여 구금자 권리 침해 혐의 전수를 즉각 공정하게 조사한다. 피해자 전원이 효과적인 구제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23.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과 여성수감자 처우와 여성 범죄자의 비구금적 처우에 관한 유엔 기준규칙(방콕 규칙)에 따라 모든 구금 장소에서 최소한의 표준을 충족하는 식사, 시설, 여성 구금자를 위한 성 및 재생산 보건을 포함한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24. 전국에 위치한 구금 시설 모두에서 인권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며, 인도주의 지원 단체가 필요(needs)를 평가하고, 교도소 및 구금 시설에 구금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vi. 가족 이산 및 납치

가족 이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으나, 가족 이산 피해자의 상황과 고통은 여전하다. 피해자 대다수가 고령인 상황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를 우선 순위 인도적 문제로 인지하고, 더 자주 가족 상봉 행사를 열고 영상으로 안부를 상호 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대한민국, 일본 및 기타 국가에서 납치된 민간인 문제 해결과 국제법 상 범죄로 규정되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구금된 외국인 석방도 즉각 이뤄져야 한다.

25. 가족 상봉 행사를 정기적으로 열고, 가족 이산 피해자가 상봉 이후에도 연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6. 더하여 영상으로 상봉을 하거나 정보, 사진, 영상을 교환하거나 전화 통화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다른 형태의 소통을 허용한다.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현재 구금되어 있는 외국인 전원의 목록을 공개한다.
28. 대한민국, 일본 및 기타 유관국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 전원의 생사를 확인하도록 신뢰할 수 있는 조사를 시작한다.

## vii.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

국제 인권 메커니즘과 협력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공동체와 인권 대화를 시작하고 필요한 개혁을 이행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해당국 정부는 2018년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고,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2019년 5월 참여하여 타 유엔 회원국이 제시한 262개 권고 가운데 132개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29.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한다.
3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 및 여타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고, 이들의 국가 방문을 허용한다. 주제별 특별절차 위임권한 수행자가 매 년 한 번씩 방문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31.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인권조약체 및 기타 인권 메커니즘이 제시한 권고 이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술 협력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포함하여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협력을 확대한다.
3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보고서를 제출한다.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 Palais des Nations, CH1211 Geneva 10 – Switzerland
- Telephone: +41 (0) 22 917 90 00 • Fax: +41 (0) 22 917 90 08
- Website: [www.ohchr.org](http://www.ohchr.org)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서울)**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서울글로벌센터 (03188)
- 이메일: [seoul@ohchr.org](mailto:seoul@ohchr.org) • 웹사이트: <https://seoul.ohchr.org>